

국방부 “군 공항 지역경제 보탬”... 군민들 “반대” 피켓팅

국방부·광주시, 영광서 '광주 군 공항 이전 사업 주민설명회'

경제 유발 효과·주민 지원책, 소음·농축산물 피해 대책 등 피력 주민들, 후보지 혜택·진행 상황 등 질문... 일부 반발에 중단 되기도

“광주군공항 이전 설명회 가중스러운 썬수다”, ‘군공항 이전 결사반대’.

7일 오후 영광 예술의전당에서 열린 국방부와 광주시가 지원하는 광주 군 공항 이전 사업 주민설명회장은 설명회 시작 30여 분 전부터 일부 주민들이 ‘공항 이전 반대’ 플래카드를 들고 행사장 입구에 모여들면서 긴장감이 흘렀다. 이들 주민들은 행사 시작 5분 여를 앞두고 설명회장으로 들어가 플래카드를 들고 한 쪽에서 설명회를 지켜봤다.

군 공항 이전 설명회가 주민 반발로 그동안 단 한 차례도 열리지 못했던 만큼 함평에 이어 영광에서 열리는 설명회에 대한 지역민들의 이목이 집중됐다. 함평과 인접한 만큼 일부 주민들은 함평에 군 공항이 들어설 경우 영광에 미치는 영향 등을 궁금해하는 주민들도 많았다.

행사를 주최·주관한 영광군 연합청년회측도 분위기를 의식한 듯 “오늘 설명회는 찬성·반대 입장을 밝히는 자리가 아닌, 군민 알권리 차원에서 마련한 설명회”라고 여러 차례 언급했다. 찬성, 반대 여건이 형성되지 않은 만큼 정보를 이해할 수 있는 자리라는 설명을 여러 차례 했다. 행사에 참석한 박준식 국방부 사무관도 “군 공항 사업이 무엇인지 들어봐라”고 했다.

박 사무관은 이어 주민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설명회에서 군 공항 이전 사업 절차와 군 부대 주둔으로 인한 경제·사회적 효과, 이전지역 주변 지원방안 등을 설명했다.

행사장에는 국방부가 광주시와 공동으로 제작한 ‘광주 군공항 이전사업’ 설명회 자료도 배포됐다. 자료에는 부대 주둔에 따라 30년 간 발생할 생산유발효과가 1조원에 이르고 5700억원의 부가가치 유발효과, 1만4000명의 취업유발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설명회에서는 군 공항 이전이 이뤄지면 간부주거시설도 부대 밖으로 조성될 것으로 예상했고, 군인 가족 등 상주 인구가 늘면서 지역경제에도 보탬이 될 것이라는 설명도 포함됐다.

군 공항으로 인한 ‘소음’ 피해 대책도 강조했다. 광주 군 공항 부지(8.2km)보다 1.4배 가량 넓은 11.7km를 공항시설 부지로 조성하는 한편, 소음안충지역을 3.6km 추가 조성하겠다는 설명도 곁들였다.

농·축산물 피해 대책도 경북 예천군 사례를 들며 “주민들과 협의해 지원사업을 실시하겠다”는 설명서 내용을 피력했다.

국방부에 이어 광주시측도 설명회장에서 군 공항 이전사업에 들어갈 총 사업비(5조7480억원)와 총사업비 중 신공항 건설(4조791억), 종전 공항부지 개발(8356억), 금융비용(3825억원) 등을 제외한 4508억원 수준의 사업비가 이전주변지역 지원에 쓰여질 것이라는 내용을 설명했다. 다만, 이들 지원사업비는 이전후보지 선정 과정에서 달라질 수 있을 것으로 예측했고 사업 내용도 주민의 견을 반영해 이전사업지원위원회에서 결정된다는 설명도 이어졌다. 광주시는 지원사업 외에도 지원방안의 하나로 추가 검토될 수 있는 ‘이전주변지역 지원특례사항’, 이주대책 등을 설명하며 공항 이전의 긍정적 효과를 알리는 데 시간을 할애했다.

설명회 도중 일부 주민들은 “왜 설명회를 영광에서 하느냐”, “그렇게 지원금액을 많이 주면 왜 옮기냐, 광주에서 그대로 하지”라며 목소리를 높이며 설명회가 잠시 중단되기도 했다. 설명회 이후에는 “함평 한우특구와 인접한 영광군 한우 농가 피해를 줄이기 위한 구체적 대안은 무엇이나”, “군공항이 들어서면 불가피한 아이들 학업 피해, 소음 피해 등에 대한 대책이 있느냐”, “광주 군 공항 이전 특별법이 개정되면 이전 후보지역 주민들을 위한 혜택이 어떻게 달라지느냐”, “함평이 내일부터 본격적인 유치에 나선다는 데 진행 상황이 어떻게 되느냐”, “함평에 군 공항이 들어설 경우 인접한 영광 군민의 피해 지원 대책은 어떻게 되느냐”는 주민들의 질의가 이어졌다.

/영광·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



영광군 지역 시민사회단체가 7일 오후 영광읍 영광예술의전당에서 열린 광주 군 공항 이전 주민설명회에서 유치 반대 손팻말을 들고 있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전남도 올해 9000억 발주... 전년보다 734억 증액

상반기 96% 목표... 지역 업체 참여·물품 도내 업체 우선구매

전남도가 올해 9456억원 규모의 사업 발주계획을 전남도 누리집과 나라장터에 공개하고 지역 업체 참여를 보장하는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꾀할 계획이다.

이는 지난해 8722억원보다 734억원이 늘었다. 공사 8373억원, 용역 728억원, 물품 355억원 등으로, 공개 내용은 사업 이름, 발주 물량, 예산액, 발주 방법이다.

발주 사업은 광양 옥곡천 하천재해예방사업

441억원, 보성 조성천 하천 재해예방사업 425억원, 무안-몽탄 지방도 확포장공사 202억원 등 934건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올 상반기에 96%인 9110억원을 발주할 계획이다. 또 22개 시·군 발주계획 규모는 지난해보다 5071억원이 증가한 3조1859억원이다. 이 역시 각 시·군 누리집에 공개하고 상반기에 집중 발주하기로 했다.

이천영 전남도 회계과장은 “고물가·고금리 등으로 어려운 지역 업체를 위해 각종 계약 시 관련 법

령에 따른 지역 업체 보호제도를 적극 활용하겠다”고 말했다.

전남도는 지역 업체 보호를 위해 공사 입찰 시 지역 업체 49% 이상 공동도급과 공사 하도급 시 지역 업체 70% 이상 참여를 보장하기로 했다. 또 물품 구매 시 도내 생산업체 우선구매와 적격심사 시 지역 업체 참여율에 따른 가점 부여 등을 운영하고 있다. 이밖에 코로나19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2020년부터 한시 운영했던 계약보증금 및 입찰보증금 요율 인하 등은 오는 6월 말까지 연장 시행한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전남에 AI 첨단농산업 융복합 지구 조성 필요”

도, 용역 추진상황 보고회

전남도에 농산업 데이터와 인공지능(AI) 등 첨단기술을 통해 첨단농산업 육성을 위한 ‘인공지능 첨단농산업 융복합 지구’를 조성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선진국과 어깨를 나란히 하기 위해서는 단기간 압축성장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연구기관과 관련 기업을 집중시켜야 한다는 의미다.

전남도는 데이터 기반 첨단 정보통신기술 애그테크 실현을 위한 첨단농산업진흥원, 빅데이터센터, 연구개발(R&D) 단지 등이 들어서는 ‘인공지능 첨단 농산업 융복합 지구’ 조성 건립을 정부에 제안할 계획이다.

이 같은 주장은 7일 전남도청에 열린 ‘인공지능(AI) 첨단농산업 융복합 지구’ 조성 타당성 연구 용역 추진상황 보고회에서 나왔다. 이날 보고회에는 김영록 전남지사, 스마트·정보통신기술(ICT) 농업 분야 전문가 등 13명이 참석했으며, 용역을 맡은 김관수 서울대 책임연구원이 용역 전반에 대해 보고했다.

김 연구위원은 디지털 전환 가속화에 따라 농업 분야도 첨단 농산업을 선도하도록 연관 산업을 집적한 지구 설립 당위성 등을 발표했다.

이어진 토론에서 명동주 씨너스 대표 등은 “인공지능, 빅데이터, 정보통신기술 등을 활용한 세계 시장 규모는 약400조원이고, 연평균 16%의 성장률을 보이고 있다”며 “농업 분야에도 디지털

첨단기술을 활용한 첨단산업으로의 대전환이 필요하고 이를 위한 인공지능 첨단 농산업 융복합 지구를 조속히 구축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국내 최대 농축산물 생산기지인 전남은 해상풍력, 태양광 등 풍부한 신재생에너지로 안정적 전력 공급이 가능하며 농식품기후변화대응센터, 아열대작물실증센터 등 농산업 기반이 잘 갖춰졌다. 농생명 혁신기관이 집적해 우수 인력 확보가 용이하며, 항공·항만 등 교통 인프라가 우수해 첨단 농산업 인프라 구축의 최적지다.

김영록 지사는 “이번 보고회를 통해 제시된 다양한 의견을 검토, 첨단 농산업 컨트롤 타워로서 역할뿐만 아니라 국가 전체 차원에서 스마트 농업 확산과 미래 고부가가치 농생명산업 육성에 기여하도록 실효성 있는 결과물 도출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건설사업장 보행안전 도우미 의무 배치

박수기 광주시의원 대표 발의

앞으로 인도를 점용해 공사를 하는 경우 보행안전 도우미를 배치해야 한다.

7일 광주시의회에 따르면 박수기(민주·광산5) 의원이 대표 발의한 ‘건설사업장 보행안전 도우미 운영 조례’가 제정됐다. 이 조례는 도로법에 따라 보도를 점용해 공사하는 경우 보행자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보행안전 도우미를 배치해 시민 보행권과 보행안전에 보장토록 하기 위한 것이다. 조례에는 보행안전 도우미 배치와 교육, 자격, 임무 등

이 담겼다.

보행안전 도우미는 건설사업장의 임시보행로에 배치돼 보행자 안내와 임시 보행로 안전 펜스, 보행안내표지판 등 안전시설 점검에서 교통약자 동반 보행, 우회 보행로로 보행자 안내까지 다양한 활동을 수행하게 된다.

박 의원은 “공사자재와 폐기물 등이 인도에 방치되면서 보행권리와 안전이 침해되는 경우가 잦다”면서 “전문교육을 이수한 보행안전 도우미가 배치돼 시민들이 더욱 안전하게 건설 현장 주변을 통행 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최권일 기자 cki@

봄, 여름, 가을, 겨울 자연과 함께 있어 외롭지 않습니다

자연과 만나는 새로운 삶의 시작,

수 목 장

이젠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미리 준비하세요”

수 목 장 의 장 점

- ➔ 반영구적 사용가능
- ➔ 관리의 간소화
- ➔ 낮은 관리비
- ➔ 자연과의 동화
- ➔ 후손들의 부담 감소

※ 윤달 이상 상담 가능합니다.

광주 친환경 수목장 메모리얼 가든

24시간 연중무휴 ☎062-464-3466